

이달의 시사 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자료,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치경찰제, 한국 사회 안착하려면?

잘 다듬지 않으면 '양날의 검' 된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 국가 중앙권력에 집중된 경찰 조직을 지방으로 일부 분산시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지방자치가 발달한 주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월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특별위원회는 정책토론회에서 “주민과 밀착하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자치경찰의 정치화가 우려되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도입 초안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이 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보자.

핵심은 경찰조직의 이원화

현행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대통령 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 아래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등이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아래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산하에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을 관할하는 한편, 별도로 각 시·도 지사 아래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및 파출소 등을 관할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즉 현재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찰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에서 각각 이원화 돼 운영되는 것.

이에 따라 현재 국가경찰 소속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의 일부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2년에는 모든 자치경찰이 사무를 이양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경찰 11만7671명의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것.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 수행 방해 등의 수사도 담당한다. 정부 조직 아래 있는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등의 수사와 전국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치안 사무만을 담당할 예정이지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 치안력 강화 체감할 것” vs “지방 토호세력과 유착 가능성 커”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되면 경찰이 지역 주민의 삶에 보다 밀착되면서 지역별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국민 맞춤형 치안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과거에는 주로 정보, 경비, 수사 등의 경찰 업무가 우선시 됐었는데, 자치경찰제하에선 이와 달리 주민 편의를 반영한 업무들을 자치경찰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주민들이 치안력의 강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즉, 지하철 범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여성 안심귀가 등에 경찰력이 최우선 배치되기 때문에 주민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주 직접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 주민의 관심과 비판들이 곧바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에 더욱 친화적이고, 밀착되는 말 그대로의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성이 온전히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지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치경찰제 특성상 지역 경찰들이 지역 유지 및 토호들과 유착돼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수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측에선 “지역경찰과 해당 지역 정재계 인사와의 유착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견제하면 된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곧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의 면밀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인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하면 경찰력이 정치 목적에 의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

한 현직 경찰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죄가 칼로 무 자르듯 지방범죄와 중앙 범죄로 나뉘는 게 아니다”면서 “만약 한 범죄자가 서울, 제주, 강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치경찰제하에서 수사 주체가 누군지, 관할은 어디인지를 놓고 업무 떠넘기기가 이어지며 수사의 혼선이 빚어져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자치경찰 독립성 확보, 업무 혼선 방지할 매뉴얼 마련 시급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자치경찰제를 놓고 찬반이 뜨거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통제원리에 따라 비대해진 권력기관인 경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까?

가장 먼저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시·도경찰위원회’ 선출이 민주적이고, 운영 또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과 이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절실하다. 특히 강력 범죄는 초기 대처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므로 초동 조치부터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등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는 치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찰 내부에서 필요없는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각각 살펴본 뒤,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자.
2. 외국의 경찰 시스템의 특징을 찾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 ② 10. 헌법과 국가기관

참고자료

동아일보, 11월 14일자, ‘서울 등 5곳 파출소-지구대, 내년 자치경찰 전환’

지도법

자치경찰제 도입은 아직 중학생들에게 어려운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지방자치 등 교과 이슈와 연관해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급에서 역할 수행 활동을 시도해보며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학생들을 분단 또는 모둠으로 나눠 특정 모듬은 정부, 특정 모듬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맡도록 한 뒤 각 모듬에 자치 경찰, 시도지사 등을 지정해 역할을 수행하며 이 개념 자체를 체득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개념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 수행 활동 이후, 학생들에게 자치경찰제 개념, 이 제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찬반 의견을 간단히 알려준 뒤 토의를 통해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수업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혜진 경북 도송중 사회 교사